

광주·전남 국회의원 18명 중 다주택자 6명

대부분 투기 목적보다 자녀 교육·부모 부양으로 다주택 송갑석·이용빈·신정훈·서동용의원은 본인 소유 집 없어

광주·전남 국회의원 18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총 6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본인 소유 주택이 없는 의원은 4명으로 조사됐다. 다주택자들의 경우 대다수 투기 목적보다 자녀의 교육과 부모 부양 등의 사유가 많았다. 문제가 된 일부 의원은 다주택 매각에 나섰다.

7일 광주일보 전수조사 결과, 다주택자는 양향자(서구을)·조오섭(북구갑)·김희재(여수을)·주철현(여수갑)·이개호(담양합평영광장성)·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 등 6명이었다. 반면 송갑석(서구갑)·이용빈(광갑)·신정훈(나주화순)·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을) 의원 등 4명은 본인 소유의 집이 없었다.

이날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 당수 앞에서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실제 거주 목적의 주택차분 서약’의 서약서를 공개하지 않고 미이행하고 있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거론된 민주당 총선기

획단의 주택차분 서약 권고대상에 속하는 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2채 이상을 보유한 국회의원 12명 가운데 이 지역에서는 양향자·김희재 의원이 포함됐다.

양 의원은 20여년 전 부산에 거주하던 시부모와 함께 살기 위해 수원의 아파트를 남편 명의로 매입했고, 분가 후 동탄에 또 다른 아파트를 남편 이름으로 매입하면서 투기 지역 2채 이상 보유 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양 의원은 지역구인 서구 지역에 전세를 얻어 지역구 관리를 하고 있다. 양 의원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 20년 이상 실거주를 하고, 시부모와 남편이 현재도 살고 있어 매매가 힘들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잠실과 용산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잠실 아파트에서 20여년 거주하다 2018년 퇴직 후 용산 아파트로 옮겨 실거주하고 있으며 기존 아파트의 전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팔지 못하고 있

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아직 3년이 되지 않아 법적으로 1가구 2주택이 아니며 일시적으로 기존 아파트의 전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못 팔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다주택 보유 의원들의 사연도 다양했다. 5채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된 이개호 의원의 경우, 광주의 아파트와 지역구인 담양의 주택 등 2채를 비롯해 형제들과 공동 지분 형태로 3채를 더 가지고 있다. 공동지분 3채는 상속 재산이며 담양 주택과 광주 아파트 등의 총가액은 5억 6400만원이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 다주택 논란’이 일자 공동 소유 3채 중 2채의 지분을 최근 정리했고, 1채도 8일째 정리할 예정이다. 또 담양의 주택도 매물로 내놓았다.

주철현 의원에 서울과 여수에 아파트 한 채씩이 있는데, 서울 서초동 아파트는 검찰 생활하면서 구매, 현재 결혼을 하지 않은 아들 등이 실거주하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지역구 아파트와 담양의 어머니 집 지분 33%(시가 2000만원)를 상속받아 실질적인 다주택자와는 거리가 멀었다. 서삼석 의원은 무안 자택과 자녀 학교 문제로 서울에 아파트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 국회의원 4명은 아예 집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동용 의원은 경기도 의왕시에 아내 명의의 전세가 주택의 전세였고, 지역구 관리를 위해 광양읍의 동생 명의 전세집을 오가고 있다. 송갑석 의원은 지난 2000년 총선 패배 이후 처가 소유인 농성동의 아파트에서 거주하며 의정활동을 위해 서울에 원룸을 월세로 임대했다.

또 이용빈 의원은 지난 2016년 ‘소유가 아닌 주거로서의 집 갖기’를 실천하기 위해 본인 소유의 집을 처분한 뒤 광주 선운지구와 서울에 각각 원룸을 월세로 얻어 거주하고, 신정훈 의원은 ‘공직에 있는 동안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겠다’는 소신에 따라 본인 소유 주택이 없다. 이병훈 의원은 서울 목동에 아파트가 있는 반면 지역구인 동구에는 전세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정치인의 투기 목적 다주택 보유도 문제지만 선거를 겨냥해 지역구에 주소지만을 두고 실거주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추미에 “좌고우면 말고 지휘 이행하라”...윤석열 압박

“지휘 배제도 장관 권한 바로잡지 못하면 직무유기”

추미에 법무부 장관은 7일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배포한 법무부 명의 입정문에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배제하는 수사지휘는 위법하다’는 검사장들 다수 의견에 대해 “검찰정법 제8조 규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총장에 대한 사건 지휘뿐만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측근 검사장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윤 총장이 지휘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이라도 본인, 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지난 2일 추 장관의 지휘서신을 받은 이후 다섯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검은 수사지휘 다음날 검사장 회의를 열고 발언 요지를 정리해 전날 법무부에 전달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수사지휘 수용 여부를 밝히는 대신 검사장들 다수 의견을 내세워 여론전을 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추 장관 입장에 대해 “시간끌기처럼 비칠 수 있으므로 무엇이든 답하라는 뜻”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송영길, 전대 불출마 선언...사실상 이낙연 지지

고흥 출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7일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8·29 전당대회에 출마하려던 꿈을 잠시 내려놓겠다”면서 “국가적 재난 상황이고 정상적인 전당대회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우리 당 대선주자 지지율 1위 후보의 출마가 확실시됐다”고 밝혔다.

특히 송 의원은 “만일 대선후보가 당대표에 낙선하면 사실상 치명적 타격을 받게 될 텐데, 정권재창출을 위한 중요 후보를 낙선시키고 당대표가 되어서 정권재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당원들에게 호소하는 것

은 액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행동 모순이 된다”면서 “따라서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유력후보의 코로나재난극복의 책임의지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분간 국회의교동일위원장이라는 직분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의 평화의 꿈, 한반도 신경제의 시대의 싹이 될 텐데, 정권재창출을 위한 중요 후보를 낙선시키고 당대표가 되어서 정권재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당원들에게 호소하는 것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승남 ‘고향사랑 기부제’ 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7일 지방재정의 확충과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개인은 물론 법인도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했고, 고향사랑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지역특산품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기부에 참여한 개인과 법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지방소멸을 겪는 농어촌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

금 제도는 자립이 어려운 지자체의 주민 복지 사업과 농어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농어촌 공동체 유지와 농어민 생존권을 위해서는 도시민과 수출기업들의 농어촌 살리기 운동이 필요하다”며 “각계각층의 기부 참여는 농어촌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환기할 것이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광주시당위원장 선출 경선 배제 합의 추대키로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6일 회동을 갖고 광주시당위원장 선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광주 국회의원들은 이번 주 내에 송갑석(서구갑) 시당위원장과 차기 시당 위원장에 뜻이 있는 이병훈(동남을), 조오섭(북구갑), 민형배(광산을) 의원 등이 모여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일단 경선은 배제하고 추대 형식으로 차기 시당위원장을 정한다는 입장이지만 합의에 이를 것인지는 미지수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주 내에 시당위원장 합의 추대가 불발된다면 송갑석 의원이 시당위원장을 재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 유일의 재선 의원인데다 그동안 별다른 무리 없이 시당을 이끌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송 의원이 시당위원장 재임을 적극 고사하고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국토부 장관과 대화하는 노영민 실장 노영민(가운데)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왼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여권서도 불만 비등...靑 ‘노영민 후폭풍’ 곤혹

김남국 “매우 부적절” 공개 비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 반포의 아파트 대신 충북 청주 집을 팔기로 한 것을 두고 민주당에서도 공개 비판이 터져 나오는 등 후폭풍이 계속되면서 청와대가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부동산 이슈로 인한 지지율 하락 우려가 번지는 가운데 비서실의 수장이 부동산 논란에 기를 부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와 노 실장이 청주 집을 매물로 내놓은 것을 두고 “지역 주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김태연 원내대표 역시 최근 SBS ‘8뉴스’ 인터뷰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여러 비판 받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노 실장을 둘러싼 논란이 민심 이반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 참모들도 곤혹스러운 반응이다. 이번 논란이 제대로 진화되지 못할 경우 결국 노 실장의 거취 문제로 이어지면 서 비서실 개편이나 개각 등 인적쇄신과 연결되지 않겠느냐는 추측도 공공연하게 흘러나온다.

이런 가운데 노 실장이 이달 말까지 다주택 참모(12명)들에게 ‘1주택만 남기고 처분하라’는 강력 권고를 내린 바 있어 이 결과에 따라 민심을 수습할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하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